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확정”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편집자 주]

Tip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1. : 대통령 인수위에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발족

2008. 2. 29.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식 출범

위원회 구성

위원장 : 강만수(대통령특별보좌관 겸임)

민간위원 : 임태희 외 26명(경제계 및 분야별 대표, 전문가 그룹)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1. 추진 배경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건설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선진화할 필요에 의해 추진됨

- ① 민간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건의(09. 1)를 토대로 선진화 방안 마련
- ②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도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함
- ③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설사업관리형CM(CM for fee)제도 도입 건의

2.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

- 법령이 정한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2011년부터 시행)
- 전문업종은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수급이 가능하고,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 가능
 - 사업관리방식(CM)을 활용한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 가능

-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 업종간 하도급제한 유지
- 공사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다양한 공시제도 마련 등 발주자 보호대책 병행(시공능력평가 항목별 공시 등)

○ 건설업종 추가 등록시 자격요건 중복인정

-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자에 대해 자격요건 중복인정(2009. 9)

	현행	개선
자본금	업종별 각각 확보	부족한 금액만 추가 확보
기술자	업종별 각각 확보	동일기술자 중복 인정

○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확대(2009. 9)
 - 국가계약제도에 반영하여 확대 시행(지방공사의 경우 기 시행 중)
-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참여 주체 간 상생협업체 운영 활성화(2009. 9)
 -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자-시공사-하도급자-납품업자-설계자 등 참여자간 상생협업체 도입시 인센티브 지원

○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하도급 부당특약 사례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마련(2009. 12)
 - 부당특약 사례 : 추가공사비 미반영, 하도급대금 유보, 선급금 부재, 민원처리비용 전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4대 사회보험료 전가 등
- 현행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보증계약 정보와 연계하여 이면계약 등 허위정보 입력 차단, 불법하도급 적발 실효성 제고(2011. 1)

○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

-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 이하 공사는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 보증하는 제도 도입(2009. 12)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개편(2009. 12)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 추진(2011년 시행)
 - 운영위 심의권한에서 보증분야를 분리, 별도 보증제도운영위원회(조합원 배제, 위원장 : 외부전문가)를 구성·운영하여 보증심사 내실화

○ 공공공사의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 턴키 및 대안 설계심의 시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의 공정성 제고(2009. 12)
 - 중앙 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20개 분야 60~80명)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사전공개, 심의결과 공개로 부패여지 최소화



국토상식

짠 바닷물에 대한 해양생물의 적응

해조류, 무척추동물, 상어류는 바닷물과 같은 농도로 체액을 유지합니다. 해양포유류, 어류, 바닷새는 바닷물보다 체액의 염분 농도가 낮습니다. 하구에 사는 생물들은 염분의 변화가 매우 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부의 염분 변화

와 관계없이 체내에 일정한 염분을 유지하거나, 외부의 염분 변화에 따라 체내의 염분이 변하는 삼투압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 규제완화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과제명	세부과제	조치사항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경쟁촉진	1. 영업범위 제한 폐지	법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2. 등록기준 중복 인정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9. 9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 완화	3. 명칭사용 규제 폐지 및 대표자격 규제 완화	법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4. 겸업금지 규제완화 방안 마련	내부검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09. 12
보증제도 개선 및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	5. 연대보증제 폐지, 공사이행보증제도 확대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09. 12
	6.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	법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7. 건설보증시장 개방 추진	법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과제명	세부과제	조치사항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등을 위해 발주방식 다양화	1. 턴키 대상공사 확대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09. 9
	2. 턴키 설계보상비 현실화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09. 9
	3. 실시설계·시공 일괄방식 도입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09. 9
	4. 새로운 발주방식제도 검토	내부검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09. 12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5. 상설심의위원회 설치	법/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09. 12
	6.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국토해양부	'09. 7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7. PQ 변별력 강화	지침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조달청)	'09. 12
	8. PQ 심사 자율권 부여	지침 개정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09. 9
	9.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09. 9
	10. 최저가낙찰제 심사방식 개선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09. 9
	11. 저가낙찰공사 심사방식 개선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공제조합)	'09. 9
공사관리 내실화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12. 발주자 역량진단 모델 및 사업관리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09. 12
	13. 공공공사 사후평가방식 체계화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명	세부과제	조치사항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설계·엔지니어링 입찰방식 개선	1. 적격심사방식 개선	시행령 개정	국토해양부	'09. 9
설계기준·대가기준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2. 지방서 체계를 성능중심으로 개선	개선안 마련	국토해양부	'09. 12
	3. 설계비 지급방식을 합리화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09. 12
	4.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지침 마련	국토해양부	'09. 12
	5. 엔지니어링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내부검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09. 9
	6. 해외진출국 지원체계 강화	사업시행	국토해양부	'09. 12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과제명	세부과제	조치사항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1.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09. 9
	2. 상생협업체 운영 활성화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09. 9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3. 포괄보증제도 도입	법/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09. 12
	4. 하도급 부당특약 제재규정 신설	법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5. 건설산업정보와 보증계약정보 연계	제도개선	국토해양부	'11. 1
상습·중복 위법사항 처벌실효성 제고	6.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 강화	법 개정	국토해양부	'09. 12

3. 기대효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병행함으로써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 향상으로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건설산업에 만연된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입찰담합 등 부정·부패 이미지 개선을 통해 '클린산업'으로 변모 기대

4.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체계

- 국토해양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과제별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시범기관 : 도로·철도·주택·토지·수자원 등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기관

○ 추진일정

- 시행령·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 과제 : 2009년 9월 까지 완료
-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 : 2009년 12월까지 입법 추진 ○